

국내단신

(정책 및 일반)

노무현 대통령, 3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 주제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COEX에서 제3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국제유가와 관련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진단한 후 향후 나아갈 에너지정책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산·학·연·관 및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과거와는 달리 新고유가시대라고 규정하고, 과거 단기적인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은 해외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에너지산업의 해외진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최근 해외자원개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4대 유형별 해외진출 전략을 제시했다. 4가지 해외진출 전략은 자원개발과 에너지 및 플랜트산업을 연계시켜 지역별 중대형 프로젝트에 진출하는 전략, 우리의 탐사기술을 바탕으로 개발권을 획득하고 상업화에 성공하는 전략, 우리의 구매력을 활용한 자원확보 전략, 정상외교를 통해 유전확보 및 전략 지역내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전략 등이 소개됐다. 이를 위해 주요 전략지역내에 동반진출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유형별 동반진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산업 해외진출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유전개발펀드를 조성하여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공사의 자산규모를 현재 1.1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고, 수출입은행의 자원개발 금융지원 자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석유공사를 2013년까지 지역의 메이저급(30만 b/d) 자원개발 전문회사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원부국과의 정상외교 확대를 통해 정상차원에서 자원확보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전방위적인 자원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제3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최근 석유대체연료로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연료'와 미래 에너지원으로의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시연회를 참관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산자부가 주최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하는 2005 에너지전시회를 둘러보고 참가기업인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盧대통령, 오만 부총리 접견 "에너지 긴밀 협력" 강조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파드 오만 부총리를 접견하고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 전체 원유 도입량의 4%, LNG도입량의 21%를 공급하는 오만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 기업들이 오만 내 각종 기간산업과 플랜트 건설, 선박건조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고 최인호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파드 부총리는 한국 기업들의 오만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를 평가하면서 "우

방인 한국과 석유, 가스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북핵문제 타결과 남북관계 진전상황 등을 설명했으며, 파드 부총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확고한 지지입장을 표명했다.

민관합동 새 에너지원 확보 나섰다

정부는 현재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정책과 더불어 에너지 위기를 대비해 근본적인 중장기 대안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에 의한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를 중요 과제로 삼고 신 성장동력 정책을 민관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정유업체들과 함께하는 종합에너지 기업 추구 전략, 학계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기술개발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APEC 에너지 장관회의의 등 국내외를 통해 총력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과 이에 맞는 산업구조 변화 등을 통해 에너지 강국의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APEC 에너지장관회의를 대비해 역내 국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는 APEC 에너지장관회의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다. APEC 정상회의가 올 하반기 부산에서 개최되는 것과 때를 같이해 오는 10월 경주에서는 제7차 APEC 에너지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 22일에는 에너지장관회의의 사전회의의 성격을 가진 '제30차 APEC 에너지실무그룹회의(EWG30)과 부속회의가 울산에서 진행됐다. 정부에서는 주봉현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산자부, 외교부 실무 담당관과 석유공사를 비롯한 유관기관 에너지 전문가 15명을 한국측 대표로 구성했다. 이번 30차 EWG 회의에서는 회원국 정부대표들 사이의 APEC 역내 에너지 안보정책을 위한 장단기 실

행계획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APEC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논의에서는 석유에너지뿐만 아니라 금속과 광물자원의 수급 안정화, 광물자원에 대한 공동탐사와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국내 기업과 학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지원 활동도 활성화 되고 있다. 산자부는 29일 '2005년도 에너지기술인력양성'을 위한 32억원의 지원대상을 발표하는 등 꾸준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에 산자부가 결정한 인력양성 지원은 지난 2003년부터 지원해 온 3개대학의 인력양성센터와 1개 기관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와 함께 향후 계획을 종합 점검한 것이다. 산자부는 서울산업대에 10억5000만원, 아주대에 10억원, 산업기술대에 9억5000만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2억원의 장학·연수기금을 출자하기로 결정했다. 산자부는 기술개발 인력확보를 목표로 '에너지·자원 R&D 기획단'을 통해 분야별 필요 전문인력을 판단하고 주요 공기업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개편을 추진중에 있다.

지난 2004년 말부터는 정유업체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들을 중심으로 종합에너지 기업 추구를 유도하고 있으며, 석유제품 수출에서부터 전력·도시가스사업·액화천연가스(LNG)·유전개발·대체에너지 등 종합적인 에너지산업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SK(주)는 국가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사업 중 수소충전소 국산화 기술개발 주관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채굴권을 포함한 유망구조 탄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GS칼텍스도 수소 연료전지 기술개발과 소형 연료전지, 가정용 연료전지 개발에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민관 공동개발 정책은 산업의 체질 변화와 함께 수소자동차 개발 등 기존산업의 신 기술개

발과 맞물려 차세대 국가에너지 정책으로 가다듬어지고 있다.

행정도시, 초절전형 혁신도시로

국가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해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에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를 '에너지 저소비형 혁신도시'로 만드는 방안도 강구된다. 정부는 오는 2008년쯤 석유공사 한국전력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이 유전 가스전 등 해외 곳곳에 투자해 놓은 지분들을 하나로 묶쳐 자원개발만을 전담하는 공기업을 신설기로 했다. 또한 일반인도 특정 유전(油田)이나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유전개발 펀드'가 내년 상반기에 첫선을 보인다.

정부는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제로 열린 제3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新)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시스템혁신전략과 에너지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참여정부 출범초 1배럴당 30달러이던 유가가 급등하고 환율도 하락하여 우리 경제가 추락하는게 아닌가 위기의식을 느꼈으나 잘 버티고 있다"면서 "건설관련 계획수립시 에너지 절약시설과 대체에너지 문제도 함께 포함해 건축문화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에너지산업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보고에서 "각종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된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의 지분을 합쳐 2008년께 '자원개발전문기업'을 만들고 이를 2013년까지 세계 50위권의 에너지 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민간이 합쳐 2013년까지 해외자원개발에 총 16조원을 투자해 현재 4%에 그치고 있는 석유 자주개발률을 18%로 끌어올리겠다"면서 "자원개발과

에너지플랜트의 성공적 동반 진출을 확대해 2010년까지 에너지산업 플랜트 수출 200억달러와 세계시장 점유율 2.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신고유가시대 극복을 위해 ▲석유 의존도 탈피를 위한 시스템혁신에 정부, 기업, 국민 등의 동참확대와 ▲오는 2007년 착공하는 충남 연기·공주 행정도시를 초절전형 혁신도시로 건설하여 혁신에너지시스템의 모범사례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또 해외 자원개발에 투입될 재원의 일부를 민간에서 조달기로 하고 제1호 유전개발펀드 상품을 내년 상반기에 선보이기로 했다. 이 펀드는 최근 발굴한 7억배럴 규모의 베트남 17-1 광구 유전을 기반으로 한 것이며 만기 5-10년의 장기상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전체 도시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한으로 낮춘 에너지 저소비형 혁신도시를 만드는 방안과 함께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 등의 도입 방안도 논의됐다.

에너지 고도소비국가 불명에 벗어나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이상의 고공행진을 지속함에 따라 국민들의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 이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은 '2005 에너지전시회'에 따로 에너지정보관을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현황과 전망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교토의정서 등 에너지 절감책, 대체에너지, 주요 현안들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한국은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97%에 달하며 이 가운데 석유 의존도가 47.6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효율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장기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지난해 전세계 11위였지만 에너지소비는 10위, 석유소비는 세계 7위로 경제규모에 비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이는 지난 90년대의 저유가 시대를 향유하면서 미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지난해 1인당 소비량은 지난해 4.51에너지 환산톤(TOE, 원유 1톤의 발열량)으로 미국(7.85)에 비해서는 낮지만 소득이 2~3배 많은 프랑스(4.35), 일본(4.03), 영국(3.82) 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지난 6년간 에너지 소비 증가율 평균은 한국 6.9%로 독일 0.1%, 영국 1.0%, 일본 1.6%, 미국 1.6%에 비해 현저히 높다.

국내 에너지 소비가 많은 이유는 석유·화학, 철강·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비중이 크고, 에너지절약이 어려운 나프타, 코크스용 유연탄 등 원료용 에너지 비중도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교적 설비의 에너지 효율이 낮고 자동차 및 가전기기 보급 증가 및 대형화도 에너지 소비 증가에 한 몫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에너지 수입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에너지 총수입액은 496억달러로 전체 수입액 2245억달러의 22.1%를 차지했다. 에너지 총수입액은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 265억달러, 자동차 수출액 266억달러를 합한 금액과 유사하다. 이에 따라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절전기술 개발 등 에너지절감 노력과 대체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어느때보다 시급하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교토의정서 발효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환경친화기술 개발도 필요하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협약이며, 우선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1차의무이행기간(2008~2012)에 각국 별로 감축 목표

를 실행해야 한다. 한국은 1차 의무이행기간에는 제외됐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인 동시에 세계 9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이기 때문에 2차 의무이행기간(2013~2017년)에는 감축 의무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돼 대책이 시급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환경친화적인 국내기술 보급과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2003년보다 13.6% 증가한 503만9000TOE로 1차 에너지 전체공급량인 2억2107만6000TOE의 2.28%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다양한 지원과 투자로 오는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5%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술혁신을 위해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수반돼야 하며 국민들의 부담은 물론 에너지 고효율 설비 교체로 기업체의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의 지원과 기업체의 노력이 어느때보다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에너지 대북 지원 비용 최대 11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2일 6자회담 공동성명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북 지원 비용 규모에 대해 “향후 9~13년간 적게는 6조5000억원에서 많게는 11조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6자회담 이후 대북 지원 비용 규모를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세부 분담 내역은 ▶북한이 핵 폐기를 진행하는 3년간 중유 제공 1500억원▶핵 폐기 후 경수로 완공 전까지 6~10년간 대북 송전 및 시설비로 각각 4조~8조원, 1조 7000억원▶경수로 건설비 7000억~1조원이다. 정 장관은 “대북 송전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제안한 만큼 정부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지만,

중유 제공 비용과 경수로 건설비는 앞으로 관련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비용 공개는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송전은 물론 중유와 경수로 건설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음을 알린 것이어서 재원 마련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북핵 폐기 절차·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경수로 비용 부담 용의까지 밝힌 것은 우리 측 카드를 먼저 보여준 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 비용 더 늘 수도=그러나 최대 11조원이라는 추산치는 향후 상황에 따라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유 지원비는 매년 50만t을 한국,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이 3년간 균등 분담하는 것을 전제했다. 그러나 북·미 간 이견이 계속되고, 핵 폐기 과정이 3년을 넘길 경우 불가피하게 중유 부담이 늘어난다. 대북 송전도 변전소 및 경기 양주~평양 선로 건설 등 시설비로 1조7200억원을 잡았지만, 실제로 북한 현지의 노후한 송전 시설 보수에 얼마가 들지는 미지수다. 경수로 건설비도 관계국이 한국이 70%를 부담한 신포 경수로를 예를 들며 한국 분담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

◆ "비전향 장기수 북송 용의"=정 장관은 "인도주 의적 차원에서 비전향 장기수 중 희망자에 대해 (북송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현재 (비전향·전향 장기수를 통틀어) 29명이 북송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수 북송 문제는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와 함께 고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종합대책 본격착수. 당정협의회 1년간 가동

부동산대책에 버금가는 에너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와 열린우리당간의 협의회가 본격 가동된

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원내대표는 12일 "오는 15일 오후 3시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정책기획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정부 내에도 이와 유사한 기획단을 만들어 1년 정도 기간으로 당정간에 대책을 논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는 정세균 원내대표, 홍재형 기획단장을 비롯해 이해찬 국무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이희범 산자부 장관 등이 참석하며 의제별로 기획단 회의 이후 확대고위당정을 통해 확정하는 방식을 취할 방침이다. 이같은 협의회는 그동안 정부가 취해 왔던 에너지 정책과는 달리 좀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특단의 에너지 정책과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에서 추진되며 고유가 대책, 신재생 에너지 개발 촉진 방안, 해외 자원 개발의 활성화, 에너지 절감 방안,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설정해 집중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개성공단에 LNG 발전소 건설되나

정부가 발표한 '2000MW 대북송전' 제안과 관련해 석탄화력발전소 추가건설보다는 LNG복합발전소를 건설,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에서 발표한 2000MW의 대북송전과 관련해 남한에 석탄화력을 추가 건설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것보다 개성공단까지 가스배관을 설치하고 LNG복합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즉 대북전력 공급을 위해 수도권으로 송전선로를 추가 건설할 필요가 없고 석탄 화력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용면에서 변환설비 및 발전소 설치비용 등 1조8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발전소 연료용 LNG직도입시 석탄화력발전소보다 연간 1200

역원 규모의 발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북송전을 위한 개성공단내 LNG발전소는 국내 전력구매계약 발전소처럼 최소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남한내 전력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즉 LNG복합발전소 투자비는 kW당 6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2000MW 발전설비에 총 1조2천억원 정도의 비용이 예상돼 약 2조원에 달하는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보다 8천억원 정도가 절감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연간 발전운영비는 석탄화력이 약 1조원인데 비해 LNG복합발전소는 2000MW 설비를 평균 90% 가동할 경우 필요한 LNG물량은 약 200만톤으로 발전소 생산단가를 고려할 때 연간 약 8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연간 1200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북송전의 경우 변환설비투자에 약 1조원, 송전선로는 약 7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LNG배관건설에는 약 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북송전 제안은 북한측에서 경수로 건설을 고집하며 6자회담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우리측의 제안이 실현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실현된다 해도 기존 전력공급 방식에 대한 정부방안의 변경 여부 가능성은 또다른 변수이다.

WEC 세계에너지총회 유치 결의

한국에너지협의회(회장 한준호 한전사장)는 지난 9월 21일 한국전력공사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3년에 개최될 제22차 WEC 세계에너지총회의 국내 유치를 결의했다. 한준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WEC 총회 유치는 국가 위상 특히, 국내 에너지산업의 발전과 기업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서 회원사 대표들은 에너지부문 세계 최대의 국제행사인 WEC 총회의 유치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유치위원회를 조만간 발족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년마다 개최되는 WEC 총회는 100개국 이상 5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로서 에너지총합전시회가 동시에 열리는 에너지업계 올림픽으로 불려진다. 이미 2007년 총회는 이태리 로마, 2010년에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기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국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선두권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이 배출량 상위국가 20개국 가운데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20일 소개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 2억2천620만에서 2002년 4억5천160만으로 늘어나 배출량 증가율이 99.7%에 달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같은 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위 20개국 중 증가율 118.6%를 기록한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것이며 증가율 3위는 96.9%를 나타낸 이란이었다. 같은 기간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평균 증가율은 16.4%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3.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미국이 16.7%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일본(18.9%), 프랑스(6.9%), 이탈리아(8.3%), 캐나다(23.6%) 등이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이 기간에 우크라이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0.9% 줄어들어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고 러시아(25.7%), 독일(13.3%) 등도 비교적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다.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2년 현재 241억 180만t으로 집계된 가운데 OECD 국가가 이중 52%인 125억5천400만t을 차지했다. 국가별 배출량은 미국이 56억5천230만t으로 1위였고 중국 32억7천60만t, 러시아 15억310만t, 일본 12억690만t, 인도 10억1천650만t 등 순이었으며 우리나라는 9위였다. 석탄, 석유 등 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에 도달한 태양열이 우주로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해 지구의 기온을 높이거나 기상 이변을 초래하는 대표적 온실가스로 꼽힌다.

‘온실가스 저감’ 정부-산업계 협약

환경부와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는 30일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이재용 환경장관, 허동수 KBCSD 회장 등 산업계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과 함께 감축키로 정부와 산업계 간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삼성전자, 포스코, LG화학, 유한킴벌리 등 20개 사이며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회계법인인 한영회계법인도 참여했다. 참여기업들은 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조사 등 배출량 검증시스템 구축, 관련 기술 개발 등 온실가스 줄이기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이행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하게 된다.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 대상기업을 환경친화기업, 수도권총량관리대상 사업장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공단, 2005 에너지전시회 개최

고효율·절전관, 에너지산업관, 신재생·수송관, 공공·연구관, 외국관, 에너지정보관 등 6개관으로 구성된 ‘2005 에너지전시회’가 9월27일부터 30일까지 삼

성동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열린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김균섭)은 올해로 25회를 맞은 이번 에너지전시회에 미국·일본·캐나다 등 15개국 151개 에너지 관련기업이 참가한다고 밝히고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관련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의 참여로 에너지절약 정책 및 기술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에너지전시회는 정부, 에너지관련 협회와 학회, 기업체를 비롯한 19개 기관에서 80회의 세미나를 갖고 수소경제 마스터플랜, 신재생에너지적용 등 강연회 및 워크숍 프로그램이 풍부하게 제공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세계적 에너지 이슈로 부상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 한국·독일 공동 신재생에너지 심포지엄(9.28), 한국·일본 CDM 워크숍(9.29) 등이 열려 정부의 정책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또한 한국도시가스협회의 소형 열병합발전 시스템 우수사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협회 ESCO 투자사례 발표회 등 에너지 절감 및 고효율기기에 관한 기술을 둘러볼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에너지 ‘자율절약’ 말뿐

국제유가가 29일 배럴당 70달러대 벽마저 뛰어넘으며서 초고유가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두바이유가 연말까지 배럴당 55~6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두바이유가 배럴당 연평균 50.55달러일 경우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0.83%포인트, 연평균 53달러라면 0.95%포인트 하락하는 암울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 정부 ‘장기 대책’ 만 되풀이할 뿐

국제유가가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장기 대책과 자율적 에

너지 절약을 거듭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원단위 3개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서비스업종과 자율적 에너지절약 협약을 맺어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그러나 강제 에너지 절약대책은 효과가 크지 않고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유보하고 있다. 석유경보지수가 경계 단계에 진입하면 약한 것부터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만 밝히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석유비축을 잘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비상시에 대비한 석유 비축물량을 적기에 사지도 못했다. 정부는 올해 비축유 구입분 630만배럴을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고유가로 지금까지 비축유를 구입하지 못했다. 올해 비축유 구입 예산은 원유 구입분 2406억원, 석유제품 구입분 226억원 등 총 2632억원이지만 유가가 올초에 비해 20달러 이상 올랐기 때문에 당초 예산으로는 비축유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630만배럴의 비축유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130억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해외자원개발 등 중장기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기본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하지만 국회에 계류 상태다. 현재 3.8% 수준인 원유자주개발률을 오는 2008년 1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에너지기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석유개발전문기업과 석유개발펀드 조성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자율적 에너지 절약대책 효과 ‘미미’

정부가 자주 기대는 자율적 에너지 절약대책은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중론이다. 산자부가 자율적 에너지절약 계획을 제출한 6개 서비스업, 170개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대형 할인점의 경우 평균 섭씨 24.7도로 자율실천계획 온도인 26~28도 보다 낮았고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은 23.3도로 지방(25.3도)보다 2도 정

도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업시간 외 불필요한 조명 자제는 편의점 등 24시간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들이 간판에 타이머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았으며 백화점협회 등 6개 협회에서 제시한 에너지절약 자율 실시계획에 대한 산하 사업장의 인지도는 50% 전후에 불과했고 편의점, 음식점은 3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산자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승용차 요일제’의 경우 공공부문에 대한 의무 이행을 밝혔을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기와 범위를 결정하지 못했으며 고유가 상황에도 7개월째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석유경보지수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오는 9월 경보지수가 나와봐야 정부의 대책을 기대할 수 있는 실정이다.

국내 업체, 평양 주유소 운영 참여 타진

국내 업체가 중국 기업과 함께 북한 평양 시내 주유소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통일부 등 관계 부처에 사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북한이 평양시내 주유소 운영에 외국 기업의 참여를 의뢰한 것이나 국내업체가 사업에 참여하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통일부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중국 ‘로이코(ROICO) 아시아’는 최근 SK네트웍스(주)측에 “평양시내 주유소 운영권을 획득했다”면서 함께 사업을 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SK네트웍스측은 지난 달 통일부에 사업 가능성을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SK네트웍스측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다”고 확인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며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나 “대북 에너지 제공이라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 있어야 한

국내외 뉴스

다”고 전제하고 “유류는 북한군의 전투력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전략물자이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투명성을 요구한다”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답신을 통일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로이코 아시아라는 회사와 이 회사가 평양시내 주유소 운영권을 따냈다는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 봐야할 사항”이라면서도 “민간 차원의 에너지 분야 대북 협력사업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이코 아시아라는 회사는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중국인이 운영하는 로이코 베이징의 자회사인 듯하다”고 덧붙였다. SK네트웍스는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미국 상무부의 ‘수출통제규정’(EAR)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회사 홍보실측은 “평양 주유소 운영과 관련한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SK네트웍스는 중국 선양(瀋陽)시와 단둥(丹東)시에서 복합 주유소 사업권을 따낸데 이어 자동차 경정비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중국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절약 홍보추진단 발족

산업자원부는 고유가상황에 대응해 국민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고 보고 범부처 차원의 에너지절약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홍보추진단』을 발족하고 14일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 추진단은 이원걸 산업자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정부 관계부처 국장급 7명, 에너지유관기관장 6명, 시민단체 2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참여 및 에너지 유관기관간 협력을 통해 개별적으로 추진됐던 에너지절약 홍보활동을 연계해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산자부, 에너지 인력양성 32억원 지원

산업자원부는 에너지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32억원의 예산을 들여 에너지 기술인력 양성센터 사업 및 장학·연수사업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지원 대상과 규모는 아주대 10억원, 산업기술대 9억 5천만원, 서울산업대 10억 5천만원, 에너지경제연구원 2억원이다.

(석유 및 가스)

유가 100달러시대 온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것이라는 경고음이 국내외에 울려 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고유가가 국내 경제에 인플레이션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고유가 2년 이상 지속될 것”

뉴욕타임스는 4일(현지시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21세기 첫 오일 쇼크를 촉발했다”면서 “유가가 100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견해는 더이상 무리한 전망은 아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의 유가 상승 원인으로 원유 공급능력 및 정제능력 부족을 꼽았다. 또 유가를 끌어올릴 돌발 변수로 ▲이라크 석유산업에 대한 공격(발생 가능성 50%) ▲나이지리아 석유 노동자들의 소동(30%) ▲사우디아라비아내 테러(10%) 등 9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캐나다에너지연구소 빈센트 라우어만은 “석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국제유가 세 자릿수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석유협회 존 펠미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우리는 이제 전인미답의 지대로 접어들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문배 연구위원은 “두바이유의 올 평균가격은 배럴당

50~55달러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돌발 변수가 현실화될 경우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와 같은 고유가 상황은 적어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국내경제 인플레이션 압력 커질 듯

삼성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두바이유가 60달러로 오르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50억달러 밑으로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은 4%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두바이유가 8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 무역수지는 30억~40억달러 적자로 반전되고, 물가 상승률은 5%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다. 삼성경제연구원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지금은 유가 상승에 따른 부작용이 환율 하락으로 상쇄되고, 기업들이 유가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고유가가 지속되면 유가 상승분이 생산비용에 전가돼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업연구원도 두바이유가 60~80달러를 유지할 경우 생산비용은 2.19~3.86% 더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국내 총생산(GDP)은 0.55~0.97%포인트, 고용은 0.35~0.61%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 임동순 박사는 "두바이유가 70~80달러를 기록하면 물가 상승이 본격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에너지 효율성 제고,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등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OECD 국가중 석유소비효율 최하위

한국의 석유소비 효율이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책 마련

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한석유협회가 최근 세계은행의 2004년 국가별 GDP현황과 BP(브리티시 페트롤럼)사의 석유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2004년 GDP(국내총생산) 1억달러당 석유소비량은 1일 335배럴로 30개 OECD 국가중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한국의 GDP는 6천797억 달러로 세계 11위이며, 1일 석유소비량은 227만 배럴로 세계 7위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1일 72배럴로 전 세계에서 석유 소비효율이 가장 높았고 덴마크(78배럴)와 영국(82배럴)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1일 114배럴로 수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405배럴을 기록했다.

한·중 석유화학협력 본격화

고유가, 위안화 절상, 원자재 값 상승 등 연이은 악재로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국내석유화학업계가 중국리스크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중국 석유화학업계와 본격협력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는 29일 제주롯데호텔에서 제 7차 한·중 석유화학 회의 개최중 석유화학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7차 한·중 석유화학 회의 개최중 석유화학회의가 오는 8월 29일부터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한국에서 이영일회장 등 주요 석유화학업체 대표와 임원 등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중국에서도 리용우(李勇武) 중국석유화학공업협회 회장 등 업계대표자 20명이 참석하여 양국 업계간 협력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 업계의 현황과 전망 및 주요품목의 시장동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 협력방안 및 양국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제 7차 한·중 석유화학 회의 개최중 석유화학회의는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와 중국석유화학공업협회를 창구로 하여 지난 '99년부터 양국업체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제 7차 한·중 석유화학 회의 개최중 석유화학업계간담회가 확대·발전된 회의로 양국 업체간 정보교환, 유대강화 및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 10일부터 비축유 방출 개시

정부의 비축유 방출이 오는 9월 10일부터 30일간 실시된다. 방출되는 물량은 제품 40만배럴, 원유 250만배럴 등 총 290만배럴이다. 산업자원부는 9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비축유 방출 요청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정유사들을 대상으로 비축유 방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비축유 방출은 한국석유공사가 정유사에 물량을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실시하게 되며 정유사별 인수 희망물량 등을 최대한 반영해 결정됐다. 방출되는 물량은 제품 40만 배럴, 원유 250만 배럴 등 총 290만 배럴이며, 이들 물량은 SK, GS칼텍스, S-Oil, 현대정유 등 4개 정유사에 방출된다. 방출기간은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총 30일간이다. 정유사별로는 SK가 원유 70만배럴, 경유 15만배럴 등 85만배럴, GS칼텍스가 원유 70만배럴, 경유 5만배럴 등 75만배럴을 받게 된다. 또 S-Oil이 원유 70만배럴, 경유 2만5000배럴 등 72만5000배럴, 현대정유가 원유 40만배럴, 휘발유 14만5000만배럴, 경유 3만배럴 등 57만5000배럴을 배분받게 된다.

산자부는 “오는 10일 여수기지의 원유 50만배럴 방출을 시작으로 정유사별 인수희망기지와 석유수급 스케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방출하게 된다”며 “정유사는

비축유를 인수한 후 1년뒤에 동종 동량의 석유를 상환해야 하며, 조기상환 또는 상환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비축유 공동방출은 IEA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최초의 사례며 이로 인해 석유수급 위기 발생가능성 감소가 기대된다”며 “또 국제유가 안정화에도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26개 회원국에 대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국제공조에 의한 비축유 방출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한국 휘발유값 세계 '톱5' ...日的 3배, 美의 7배 넘어

휘발유 값이 L당 1600원을 넘어서면서 고통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셀프 주유를 하거나 가격비교사이트를 찾아다니며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 휘발유 소비자 가격의 62%를 세금으로 건어가는 정부는 “유류세를 낮추면 소비가 늘어나 국민경제에 부담이 된다”며 유류세 인하를 거부하고 있다. 국내 휘발유 값은 국제적으로 어떤 수준일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봤다.

◆ 국민소득 대비로 한국이 최상위권

미국의 석유가격조사전문지인 에너지 데탕트는 올 6월 현재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1개국의 휘발유 소비자 가격과 세금 비중을 최근 발표했다. 이 가운데 6월 말 현재 휘발유 값이 가장 비싼 나라는 L당 1549원(이하 모두 한국 돈으로 환산)을 받은 영국. 세금이 1100원으로 세금 비중이 71%에 이르렀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이탈리아 등 유럽의 선진국들도 60%가 넘는 세금 비중으로 L당 1400원대였다. 6월 평균가격이 1402원이었던 한국은 21개국 가운데 8위. 세금 비중으로 따지면 62.1%로 10위였다. 한국석유공사는 “선진국들의 소비자 가격과 세금 비중이 높은 이유

는 이들 국가 대부분이 석유 수입국이어서 높은 세금으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라마다 경제수준이 다르기 마련. 따라서 절대치가 아닌 상대치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해서 21개국을 비교하면 한국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 소비자 가격을 1인당 국민소득으로 나눈 뒤 한국을 100으로 놓고 계산했을 때 각국의 휘발유 값은 일본 31, 미국은 14,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46에 불과하다. 국민소득 대비 휘발유 값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4개국뿐. 수출산업이 취약해 석유 소비가 늘어나면 달러 유출을 감당할 수가 없어 의도적인 고(高)유가 정책을 쓰는 국가들이어서 한국과 비교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 “세금 낮추자” vs “장기적으로 손해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유사들에 가격 인하를 지시했다. 이 지시가 지켜지지 않으면 특별세를 부과해 서민들에게 이를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유가 폭등과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영향으로 휘발유 값이 치솟자 조지아 주가 잠정적으로 휘발유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유류세로 21조4571억 원을 거둬들였다. 전체 국세 세입의 18.2%에 이른다. 이에 따라 최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인 한나라당도 유류세 10%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박병원(朴炳元)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세금을 깎아가면서 기름 값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류세 비중 5년만에 최고

지난해 국세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년 만

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4일 재정경제부와 대한석유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에 부과된 교통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관세 등 유류세는 21조 45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국세 세입액의 18.2%에 해당하는 수치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의 21.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류세 비율은 2000년 17.4%, 2001년 17.1%, 2002년 17.8%, 2003년 17.5% 등으로 17%대를 유지했었다. 유류세 총액도 1999년 15조 8544억원에서 2000년 16조 1749억원, 2001년 16조 4149억원, 2002년 18조 5005억원, 2003년 20조 532억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석유 소비량은 7억 5232만배럴로 전년보다 1.4% 감소했다”면서 “유류세 증가의 원인은 석유 소비 증가보다 에너지 세제 개편 등에 따른 세율 인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유류에 대한 교통세와 특수세를 각각 10% 내리기 위한 교통세법과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놓고 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올해 국제유가가 100% 이상 오른 반면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국내 유가는 10% 남짓 밖에 오르지 않아 유류 소비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세금을 깎아가면서 가격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05 동북아석유포럼’ 개최

‘2005 동북아석유포럼’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으로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산업자원부 이원걸 차관, 에너지경제연구원 방기열 원장, 일본 최대 석유회사인 신일본석유 나히토 마사히사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이사장, 중국 석유학회 석유경제위원회 왕귀량 주임, 대한

국내외 뉴스

석유협회 고광진 회장과 허동수 GS칼텍스회장, 현대 오일뱅크 서영태 사장, 중국 국영석유회사인 SINOPEC 왕티엔푸 총재 등 한·중·일 3국의 석유회사 CEO를 비롯해 석유전문가 및 관계자 약 250여명이 참석했다.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일 3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날 전경련 강신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북아 3국의 경우 지속적인 경제 발전으로 인해 수요가 급증해 석유 의존도가 매우 높아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석유구매, 비축, 수송분야 협력과 에너지 절약기술 및 친환경 에너지개발 협력 논의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강 회장은 또 “에너지 협력의 상당부분은 정부간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민간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교류한 후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에너지 문제에 있어 작은 협력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자원부 이원걸 차관도 “2004년 이후 국제석유시장의 경우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TEA(국제에너지기구)의 비축유 방출,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증산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중일 3국의 일일 석유소비량은 1천400만배럴로 이중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원유 공급이 절실하다”면서 “FTA 등 지역경제 통합 추진하고 있는 역내 국가간 시너지 창출 및 에너지 확보 위기 공조체제 강화가 필요하며 민간차원 에너지협력이 정부차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에경연 방기열 원장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넘나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지만 공급확대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면서 “이러한 문제는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태로 공동 협력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나이토 마사히사 이사장도 “한·중·일 3국이 협력함으로써 커진 시장을 통해 구매력을 발휘하고 중요한 시장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원자로 효율적 개발, 인프라 정비 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파이프라인 건설은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에너지 안정공급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에도 공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석유 안보확보(Security), 환경문제해결(Sustainability), 시장 안정성(Stability) 등 3S를 공동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왕귀량 중국석유학회 석유경제위원회 주임은 “고유가 시대 대체, 환경오염 절감, 에너지절감 등에 대한 공동 협력이 중요하다”며 “대체에너지개발, 운송로안정, 에너지 절감 등 많은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보완하면서 상호 윈윈하자”고 말했다.

“국내 정유사들 휘발유값 폭리”…작년 8800억 차이

국내 정유사들이 기름값을 원유도입가격이 아닌 국제 현물시장 석유제품가를 기준으로 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22일 “국내 정유사들은 지난 2001년 이후 3년 만에 3.2배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며 “이는 정유 5사가 실제 원유 도입가격 기준이 아니라 싱가포르, 일본 등의 현물시장 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세전 공장도가격을 산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1리터당 국제제품가와 원유도입가 차액이 97.55원”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정유 5사는 지난해 휘발유 내수판매에서만 8800억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정유사들이 지난해 국내 휘발유 판매에서 얻은 차익은 80만6000가구의 연료비 지출 규모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특히 “석유

제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있지만 산업자원부는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심지어 2004년도 국내 석유제품의 세전 공장도가격의 수준을 적정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결국 실제 원유도입가격과 국제 제품 가격의 격차가 증가함에 따라 정제마진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가격결정체계 하에서 현재와 같은 고유가 시대가 계속될수록 정유사의 폭리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자부는 정유사간 실질경쟁 도입을 위해 대책을 내놓아야 하고, 공정위는 정유 5사에 대한 담합여부와 가격결정 방식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석유협회는 해명자료를 통해 “미국과 EU, 일본 등 선진국도 원유 도입가격이 아닌 국제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원유 도입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 역시 경쟁체제여서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밝혔다.

휘발유소비 6개월만에 급감

고유가 여파로 휘발유 소비량이 6개월만에 큰 폭의 감소세로 돌아섰다. 산업자원부가 29일 발표한 ‘월별 석유소비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휘발유 소비량은 488만 4000배럴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3만 1000배럴보다 10.1%나 감소했다. 올 들어 휘발유 소비량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월 -1%를 기록한 이후 2월 12.5%, 3월 8.1%, 4월 4.9%, 5월 4.7%, 6월 10.2%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휘발유 소비량은 7월의 경우 차량 신규 등록대수가 4만 833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 5378대보다 36.6%나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차량 한대당 휘발유 소비는 더 줄어든 셈이다. 반면 가격

에 민감하지 않는 부유층이 많이 찾는 고급 휘발유와 상대적으로 값이 싼 LPG 등은 소비가 늘어났다. 고급 휘발유 소비량은 중대형 수입차의 등록대수가 2687대로 전년 동월(2291대)보다 17.3% 늘어난 영향 등으로 지난해 7월(1만 6000배럴)에 비해 54.1% 증가한 2만 4000배럴을 기록했다. 고급 휘발유는 4월 40%, 5월 53.3%, 6월 67.7%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값이 오른 경유 소비량은 전년 동월(1025만배럴)보다 3.3% 줄어든 991만 1000배럴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값이 싼 LPG는 전년 동월(400만 1000배럴)보다 13.1% 늘어난 452만 5000배럴이 소비됐다. 석유 소비는 5683만 1000배럴로 1.1% 늘었다. LPG, 나프타 등의 소비가 늘어난 탓이다.

대북에너지사업에 가스공급 적극 검토해야

대북에너지 사업에 가스공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은 “가스는 대북에너지 지원 사업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며 가스공사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김의원은 “북한은 현재 평양시내 일부의 취사용 LPG 사용이 전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대북에너지 사업의 걸림돌은 큰 틀에서는 ‘북핵’ 문제이며 또 다른 축으로는 대북지원에너지의 ‘군사적 전용가능성’이다. 그러나 취사, 난방용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가스’는 그 특성상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①개성공단 조성 확대와 더불어 건설될 배후도시에 대한 난방 및 취사용 가스의 공급 확대 ②북한의 생산 및 생활 구역 특성에 따른 열병합 집단에너지 사업 진출을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즉, 북한의 연합기업소, 기업소, 생활단지 등을 대상으로 구역형 전력과 열을 공급하는 열병합 집단에너지 사업 진출이 가능하고 이것은 향후 대북에너지사업에 있어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또한 장점으로 배관망이나 송전망 구축을 위한 장시간의 소요 이전에 육상, 철도, 선박 등을 통해 이송이 용이하고 경의선 사업, 남북 해운항만 사업의 확대, 육상운송로 연결 및 북측 지역 저장탱크 건설 등으로 신속히 가스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성공단을 스테이션으로 하는 남북 가스배관망 연동 작업, 시베리아 PNG 프로젝트와 연결하여 북측지역 배관망 설치, 청진, 함흥 등에 LNG 저장기지 건설 등을 병행 추진하는 동북아 PNG 프로젝트 추진도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향후 대북에너지 사업 및 동북아 에너지 협력 구축을 위해 가스가 갖추고 있는 장점을 십분 활용, 대북에너지 사업에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자위, 석유공사 유가예측 부정확성 집중거론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예측의 정확성 부족으로 비축유구매 비용이 3년동안 1천800여억원 늘어나고 올해 비축목표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26일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 민주당의 이상열 의원 등은 비축유 구입 추가부담, 비축유 구입 차질, 유가 예측의 정확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안 의원은 석유공사가 유가 예측을 잘못해 2003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비축유 구매 부담이 1천820억원 추가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석

유공사가 설정한 비축유구입 목표단가 대비 실제 구입단가의 차이가 배럴당 2003년 17달러, 지난해 12달러, 올해 19달러로 매년 10달러 이상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제 비축유 구입을 위해 2003년 745억원, 지난해 181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했고 올해 부담 예상 금액까지 합하면 최근 3년간 1천 820억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올해 비축유 구입 예산은 배럴당 36.33달러를 기준으로 책정됐다가 7월 현재 도입단가가 53.26달러에 달해 두 가격의 차이가 배럴당 16.93달러에 달한다며 계획된 물량을 구입하기 위한 추가예산 확보 대책을 물었다. 정부는 올해 원유 600만배럴, 석유제품 30만배럴 등 총 630만배럴의 원유 및 석유제품을 구입해 비축할 계획이었으나 비축유 구입 예산이 책정되던 당시의 유가와 올해 실제 시장 유가의 차이 때문에 아직까지 비축유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매년 국제유가 예측가와 실제 단가가 차이나는 것은 유가 예측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정확한 유가예측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석유공사 내 석유정보처의 해외정보 조사분석인력이 현재 9명으로 미약해 자체 조사 및 정보조사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지나치게 케임브리지에너지연구소(CERA), 에너지안보분석사(EASI) 등 외국기관에 의존하고 있다며 유가 예측 시스템 정비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석유공사, 베트남서 유전 발견

석유공사와 SK(주)가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베트남 15-1 광구에서 네 번째로 양질의 유전이 발견됐다. 잠재 매장량은 약 1억2000만 배럴로 우리나라가 6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며 기존에 발견된 15-1 광구 내 세

개의 유전 매장량(5억6800만배럴)의 20%에 해당한다. 산업자원부 신창동 자원개발과장은 1일 “베트남 15-1 광구에 네 번째로 시추한 ‘수투노(Su Tu Nau, 갈색사 자란 뜻) 구조에서 양질의 원유가 발견됐다”며 “내년 중 평가 시추를 통해 매장량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과장은 “이번에 발견된 유전에서는 2009년께 원유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유공사는 ‘베트남 석유가스공사(페트로 베트남), 미국의 코코노 필립스 등 컨소시엄 공동사업자들과 함께 7월 26일부터 15-1광구의 네 번째 시추에 착수, 해저 3372~4376m의 기반암층에서 원유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앞서 석유공사는 2001년 8월 발견에 성공한 ‘수투덴(Su Tu Den, 흑사자) 유전에서 2003년 10월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해 현재 하루 8만 배럴을 생산 중이다. 석유공사는 이어 2001년 10월 발견한 ‘수투방(Su Tu Vang, 금사자) 유전에서도 2008년부터 본격 상업생산을 한다. 이 경우 15-1광구의 하루 생산량은 총 16만 배럴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5-1 광구 컨소시엄의 지분은 한국의 석유공사와 SK(주)가 각각 14.25%와 9%를 갖고 있다. 나머지는 페트로베트남(50%), 코코노 필립스(23.25%), 프랑스의 지오펜트롤(3.5%)이 보유하고 있다.

재정부 한·러 가스협정 연내 타결, 서명

한국의 가스도입과 가스전 개발, 가스분야 기술협력, 천연가스 파이프라인(PNG) 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한 ‘한·러 가스협정’을 연내 타결·서명하기로 했다. 한국과 러시아는 2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제6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교역·투자, 철도연결, 에너지·자원, 우주기술 등 양국 경제협력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결과를 28

일 발표했다. 양국은 또 러시아 광물자원 공동탐사, 기술협력, 공동개발 등을 위한 한·러 광물자원협력협정을 내년 상반기중 타결하기로 했다. 동시베리아, 사할린 등 극동지역 유전 공동탐사,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유지·안전, 신규 발전설비 개발 등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경제·통상관계 발전을 위해 지난해 9월 정상회담에서 작성기로 합의한 ‘실행 계획’(Actoin Plan)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양국은 현재 러시아 정부가 승인절차를 진행중인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협력 사업’(KSLV-1)을 양국이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양국은 양국간 자유로운 해운교역 증진과 항로 안정화를 위해 해운협정을 조속한 시일내에 체결하기로 했다. 또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을 본격 논의하기 위해 남·북·러 3국간 제2차 철도전문가 회의 개최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6개 부처 차관보, 국장급 9명 등 24명이 참석했다. 양국 기업인의 협력증진 기구로 ‘한·러 민간 경제협력위원회’가 이날 출범해 기존 민간채널인 ‘한·러 재계회의’와 함께 양국간 경제협력 활동을 하게 됐다.

충주·음성지역 10월부터 천연가스(LNG) 공급

충청북도가 북부(충주, 제천, 진천, 음성)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항을 해결하고자 2002년부터 추진하여온 북부지역 천연가스공급 사업이 일부 완료되어 충주시가 '05.10.1일부터 음성군 일부지역이 10.5일부터 천연가스가 공급될 것이라고 하였다. 진천지역은 2006년부터 제천지역은 금년 10월중 착공하여 2007

년 6월부터 점진적으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제천지역 주민들이 천연가스(LNG) 조기도입을 희망하고 있어 충북도는 산업자원부 및 한국가스공사에 천연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연가스(LNG)는 장기공급계획에 따라 공급되기 때문에 연료수급의 안정성이 뛰어나고 사고 위험성이 매우 적은 가스로서 타 연료에 비해 연료가격이 저렴하여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사회 간접자본중 하나로서 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향상은 물론 주민 유입효과, 기업체의 투자환경이 개선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천연가스 공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충북 북부지역의 에너지비용이 매년 약 544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지역별로 충주지역이 110억원, 음성·진천지역이 304억원, 제천지역이 130억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또한 남부지역(보은, 옥천, 영동)지역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타당성 조사를 2006년도에 실시한다고 한다.

LPG수입가격 폭등...사상최고가 경신

LPG수입가격이 4달 연속 급상승하면서 사상최고가를 또 다시 경신, 동절기에 접어든 LPG 국내가격에도 비상이 걸렸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사는 28일 국내 LPG수입사인 E1과 SK가스에 10월 수출가격(CP)을 프로판은 505달러/톤, 부탄은 525달러/톤으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달에 비해 프로판은 톤당 80달러, 부탄은 78달러나 상승한 것은 물론 기존 최고가였던 2004년 11월의 프로판 463달러, 부탄 473달러에 비해서도 42~52달러/톤이나 치솟아 사상 최고가격을 다시 경신한 것이다.

수입사 관계자는 LPG수입가격 폭등에 대해 “최근 미국에서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의 피해를 입은 정유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중동지역 LPG가 유럽과 미국에 공급되고 있어 아시아에서는 물량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공급물량 부족현상에 이어 국제 유가도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국제 LPG가격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LPG수입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현재의 환율 1035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11월 국내 LPG가격은 kg당 100원 정도의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수입사 관계자들은 예측했다. 이와 함께 태풍피해를 입은 미국 정유공장의 피해복구가 늦어질 경우 LPG국제가격은 더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동절기를 맞아 사용량이 늘어나는 국내 LPG공급자와 소비자에게도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천연가스 경쟁도입 3단계 방식 유력

천연가스시장 경쟁도입의 정부방안 구체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수행중인 용역 초안 중 도입·판매부문은 3단계의 단계적 경쟁도입 방식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민주노총·공공연맹·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 주최로 충북 진천에서 열린 제4기 가스노조 간부학교에서 발표된 구조개편 추진계획 및 전망중 예경연에서 수행 중인 용역안에 따르면 새로운 도입도매사업자가 가스 산업에 진출시(직도입자의 도입도매판매사 진출 또는 다른 형태의 도입도매사업자 출현) 2008년 도입계획인 계약물량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계약을 양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물량은 신규도입물량 비율 혹은 새로운 형태의 물량양도를 통해 가스공사의 신규물량도입 배제 및 기존물량 양도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경연 용역초안에 따르면 도입·판매부문은 단계적 경쟁도입으로 진행하며 1단계 도입경쟁부분에서는 기존 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 신규 도매사업자, 직도입자의 도입경쟁력을 비교평가(총량수급 및 요금규제 지속)하고 2단계 도매경쟁부분에서는 발전사 및 도시가스사에 대한 도매사업자 선택권을 부여(총량수급 및 도매요금 규제폐지)한다는 것이다. 3단계 소매경쟁부분에서는 산업용 등 소매부문 대량수요자부터 단계적으로 도시가스사 독점판매권 및 소매요금 규제폐지 등 판매사업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설비부문에서는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하되, 배관시설은 단일 소유체제 유지 및 표준화된 비차별적 공동이용제(OA)를 실시하고 제조시설중 저장시설은 자체보유·건설 또는 독차점 입차, 공동이용제 실시를 한다. 사업자는 저장규모 30일분, 직도입자는 10만kl를 유지토록 하며 긴급대응분은 가스공사가 일정수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타 제조시설은 자체보유 및 건설 또는 공동이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노조는 지난 7월 정부가 마련한 직도입관련 운영지침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춘 직도입 희망자들은 가스수급상 필요시 정부의 조정명령을 한다는 전제하에 누구나 직도입을 할 수 있으며 산업설비의 신·증설, 연료대체 등은 신고만으로 물량 수입이 가능하다며 2010년 이후 도입물량 450만톤은 전량 발전자회사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도입 운영방침으로 향후 도입계약시 가스공사의 완전배제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가스공사는 도입판매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고 GS 등도 신규물량을 도입추진함에 따라 비슷한 여건에 있는 포스코파워(전 한국종합에너지), 메이아 등의 물량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월~8월 LNG 1450만톤 판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8월 한달간 전년동기대비 8.7% 증가한 116만2천톤의 LNG를 판매했으며 이중 도시가스용은 52만9448톤, 발전용은 63만2814톤으로 각각 전년동기 대비 6.9%와 10.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월~8월까지 누적판매량은 총 1450만6577톤으로 전년대비 0.8% 증가했으며 이중 도시가스용은 897만4623톤, 발전용 553만1954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9.3% 증가, 1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국내 LPG가격 동결

지난달 kg당 44원 인상됐던 국내 LPG가격이 9월에는 동결됐다. 수입사 E1 관계자에 따르면 8월 LPG수입가격이 프로판 2달러/톤, 부탄 5달러/톤씩 인상됨에 따라 kg당 4원 가까운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환율이 1035원에서 1020원대로 떨어짐에 따라 kg당 10원 내외의 인하요인도 함께 발생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승 인하요인이 상쇄작용을 해 조정요인이 미미하고 향후 국제가격이 불안해 시장혼란에 대비하게 위해 가격을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9월 국내 LPG가격이 동결됨에 따라 E1과 거래하는 충전소에 공급되는 프로판은 678원/kg, 부탄 1089원/kg(635.98원/l)으로 동결됐다. 한편 근래들어 서부텍사스중질유가 배럴당 70달러 선까지 위협하는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9월 LPG수입가격이 20~30달러/톤 정도 큰 폭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10월 이후 국내 가격은 상승세가 예상된다. 특히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동절기로 접어들면 향후 국내 LPG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LPG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한·독 공동 신재생에너지 심포지엄**

에너지관리공단은 28일 독일 NRW(독일 노르드라인 베스트팔렌주 경제개발공사) KOREA와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화에 대한 공동 심포지엄을 가졌다.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독일 베스트팔렌주 경제·에너지부 폴크하르트 리히먼 수석국장과의 에너지관리공단 김균섭 이사장의 환영사로 시작해, 독일 NRW주 신재생에너지와 고효율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전망 등이 발표돼 양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가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특히 심포지엄이 끝난 후에 독일측 12개 기업체들이 지열을 이용한 대형건물의 냉난방 공급, 한국의 풍력발전설비 사용 전망, 바이오가스 설비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상용기술과 사례를 설명해 관람객들이 유럽의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과 정책동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개별적인 기업상담회도 병행해 단순한 세미나 형식을 벗어나 기업과 기업이 효율적으로 연결되는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원자력발전 비중 확대 공식화

정부가 '신고유가 시대'의 중장기 대책 일환으로 원자력발전의 비중 확대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산자부는 28일 '제3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서 에너지수급시스템의 혁신방안과 관련, 석유의존도를 안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이 원자력발전 비중의 축소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과정이 선결 과제로 제기된다.

◆ 석유비중, 46%에서 29%로 축소 = 산자부는 공급시스템 혁신의 최우선 과제로 석유의존도 탈피를 꼽았다. 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확보는 물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을 활용한다는 것. 수송부문 대체에너지원인 바이오연료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경제시대를 대비한 수소경제 종합마스터플랜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한 원자력의 적정비중을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공식화했다. 산자부 고위관계자는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97%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고유가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석유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면서 “석유비중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개발·보급을 위해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고, 대중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원자력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수소경제종합마스터플랜’을 작성하면서 석유의 경우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45.7%에서 2040년 28.9%로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에너지초절약형 혁신도시 건설 = 수요시스템의 혁신을 위해서는 에너지저소비형 경제·사회시스템을 도입한 초절약형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신행정중심복합도시’를 초절약형 모범 혁신도시로 조성키로 하고, 이곳에 건립되는 공공건물은 물론 도로·주택·편의시설에 대해 에너지총량제 개념을 포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2012년까지 100만호가 건설될 예정인 국민임대주택의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도 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에 추가, 에너지사용 총량을 조정키로 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전기·석탄

가격의 합리화를 추진하고, 바이오연료 도입·하이브리드카 및 수소연료전지차량 개발 등을 통해 석유소비의 33%를 차지하는 수송부분 석유의존도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협의회’ 구성 = 산자부는 에너지산업 해외진출이 자원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고 분석하고, 4대 유형별 해외진출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자원개발과 플랜트산업을 연계해 지역별 중대형 프로젝트에 진출한다. 이 방안은 최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전력, 대우조선해양이 컨소시엄을 구성, 나이지리아 초대형 유전의 광구개발권을 획득한 사례에 기인했다. 둘째, 선진화된 탐사기술을 바탕으로 개발권을 획득, 상업화하는 전략이다. 실례로 1일 생산량이 8만배럴에 달하는 베트남 15-1광구의 경우 독일 등 세계 유수기업도 탐사에 실패했지만 석유공사가 탐사에 성공, 개발권을 따냈다. 셋째, 구매력을 활용한 자원 확보 방안이다. 단일회사로 가스구매량이 세계 1위인 한국가스공사는 카타르와 오만에서 LNG 지분을 확보하기도 했다. 넷째, 정상외교를 통해 유전확보 및 전략지역에 성공적으로 진출한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러시아 서캅카스 유전이나 카자흐스탄 잠발유전의 광구개발권 획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자원개발 기업(공기업·민간기업)과 플랜트 업계, 코트라, 전경련과 공동으로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협의회’를 구성, 분산된 국내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 나이지리아, 리비아, 인도네시아 등에 민관합동조사단을 파견해 동반진출이 가능한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달 예비전력이 650~890만kW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박수훈)가 이번 달 예비전

력이 650~890만kW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전망했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수요 변동 상황을 회귀분석에 의한 최대전력 예측수요가 전년동월대비 6.2% 증가한 4946만kW, 주별 전력 예비율이 13~19%수준이 될꺼라고 내다봤다. 또 실질적인 전력수요 성장률인 평균전력은 3934만kW로 전년동월대비 6.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달 발전기 정비는 월성원자력 1호기가 예방정비에 착수하는 등 28대가 정비에 착수, 진행하며 신인천 복합화력 GT 11호기 등 3대의 발전기 정비가 완료된다. 또 이달 발전량은 전년동월대비 6.8%가 증가한 286억6000억kWh이며 원자력 39.1%, 석탄 37.2%, 가스 14.2%의 비율로 발전할 계획이다.

지역난방공사, 신재생에너지 분야 적극 진출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영남)는 이번 에너지 전시회를 통해 지역난방의 개념과 효과를 소개하고 관람객들에게 사업내용과 비전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있다.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시모형 위에 3D 입체영상 이 나타나 모형을 설명하는 ‘매직비전(Magic Vision)’ 방식을 도입해 지역 난방의 생산 및 공급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 홍보관에는 실제 열배관이 전시되어 있어 직접 체험도 할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985년 11월 에너지 절약, 환경공해 개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 설립됐다. 최근에는 지역난방 전문기업에 안주하지 않고 집단에너지 사업의 고도화, 지열·풍열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진출 등 사업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난방 및 열병합발전 보급 확대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역난방은 기존난방에 비해 64%의 연료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대기오염

의 주범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29% 줄이고 이산화탄소는 49%나 감축시킨다.

지역난방공사는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청정개발체계(CDM)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는 한편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사용되는 저유황왁스유(LSWR)와 벙커C유를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에너지 연료로 대체할 계획이다. 또 쓰레기 소각장 등 자원회수시설의 폐열과 매립가스 등 미이용에너지의 지역난방 활용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공사측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지난 7월 산업자원부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참여 협약(RPA)을 체결했다.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등 9개 에너지 공기업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협약은 오는 2008년까지 1조1000억원을 투자, 선진형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공급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100만kW급 원자력발전소의 1/3규모인 34만4000kW, 9개 공기업의 설비투자가 끝나면 21만 석유환산톤의 신재생에너지가 공급돼 매년 원유 159만배럴(876억원)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체 발전량중 신재생에너지전력 비중은 지난해 1.3%에서 2.0%로 늘어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매년 17만톤 이상 줄어든다.

LG화학, 획기적 휴대용 연료전지 연말 상용화

석유 등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고효율·친환경 신재생에너지원인 연료전지를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업체에서 최초로 개발됐다. LG화학(대표 노기호)은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휴대용 연료전지 개발을 완료하고 빠르면 올해 말까지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LG화학이 이번에 개발한 휴대용 연료전지는 전극층의 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 등을 적

용해 시스템 운영의 불안정성을 해소, 연료전지 상용화의 최대 걸림돌인 짧은 수명과 신뢰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품이다. 이 연료전지는 수명이 4000여 시간 이상으로 일본, 미국 등 경쟁사들의 시제품과 비교해 8배 이상 길어진 것이다.

휴대용 연료전지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짧은 수명, 낮은 시스템 안정성, 높은 제조 단가로 인해 그 동안 상용화가 지연돼 왔다. 그러나 LG화학의 휴대용 연료전지 개발은 고도의 부품 및 시스템 운영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적 난제를 해외 경쟁국보다 한발 앞서 해결함으로써 향후 휴대용 연료전지 시장을 선점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휴대용 연료전지의 세계 시장규모는 2006년 6억 달러, 2010년에는 19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연평균 성장률 28.3%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LG화학의 휴대용 연료전지는 1리터 이하의 내부 부피와 1kg 이하의 무게를 갖는 초소형 제품으로 개발돼 휴대가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다.

메탄올이 들어있는 연료 카트리지의 교환을 통해 노트북PC 등 휴대 전자기기를 별도의 전원 공급 없이 장시간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1개의 연료 카트리지(용량 200cc)는 노트북의 경우 10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LG화학이 개발한 휴대용 연료전지는 세계 최대인 평균 25W 출력으로 DMB 휴대폰, PMP 등 순간 고출력이 필요한 휴대 전자기기들에도 직접 구동할 수 있으며, USB 포트를 이용해 기존 휴대폰의 내장 배터리 충전도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LG화학은 앞으로 전력소모가 많은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춘 노트북 및 휴대폰 등 휴대전자기기의 개발이 속속 진행됨에 따라 50W급 고성능 연료전지도 개발해

제품군을 다양화하고, 이미 보유한 부품·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고가 부품의 내재화율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중기 LG화학 CTO 사장은 “이번 개발로 차세대 성장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휴대용 연료전지 분야의 상용화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국제적으로 휴대용 연료전지의 제반 안전규격이 제정되는 올해 말부터 노트북PC, 휴대폰, 군사용 휴대전자장비 등 시장 수요에 맞춰 바로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소시대 도래, 수산업에 일대변혁될 것

본격적인 수소시대의 도래는 30~4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파급효과면에서 전산업에 걸쳐 일대변혁을 가지고 올 잠재력을 지녔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발간된 한국가스공사 가스경영연구소 계간지 ‘가스산업’에서 강정욱 연구원은 ‘수소시대와 기존 에너지 기업의 기회’라는 논고에서 수소시대의 도래는 동종업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이종 산업간의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욱 커지며 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단계까지의 유기적인 구성과 표준화동향, 전반적인 정보축적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소시대로의 전환은 기존 에너지기업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큰 파도와 같을 것이며 현재의 에너지 공급구조의 필연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현 에너지 공급구조에 고착되어 있는 기업형태가 어떤 식으로든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술과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투자를 재조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독자적으로 구상해 정책과 환경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천연가스는 화석연료의 마지막 세대로 수요가

늘어가고 있으며 수소경제로의 전환이 이뤄진 이후에도 일정기간 탄소에너지와 수소에너지간의 에너지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천연가스 개질로 인한 수소생산이 더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천연가스 수요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열병합이라는 효율측면에서 뛰어난 에너지 변환을 통해 전력과 직접적인 경쟁에 들어섰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는 것. 이와 함께 수소의 보급은 관련 인프라 구축의 문제이며 생산된 수소의 보급은 수소에너지 사용의 확대가 일정수준까지 이뤄졌을 경우, 기존의 화석에너지 인프라의 활용과 신규 수소에너지 인프라의 구축 등 총체적인 비용측면의 접근이 가능할 것이며 그 이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하나의 방안은 기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프로젝트로 천연가스 배관을 이용한 수소의 파이프라인 공급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막대한 인프라 비용을 그대로 지불할 경우 수소에너지는 기존 에너지와 가격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수소정책 집행기구 신설 본격 논의

‘수소경제이행촉진법’(가칭) 제정을 검토하고 이를 전담할 기구인 ‘수소경제센터’의 지정 또는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열린 ‘친환경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마스터플랜(안) 공청회에서 에경연의 부경진 박사는 수소경제센터 집행기구의 신설과 이를 심의, 견제할 경제성 평가위원회 구성을 검토해야한다고 발표했다.

수소경제센터구성안은 세 가지 안으로 1안은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확대개편하는 방법, 2안은 에기연, 신재생에너지센터, 에경연의 통합추진 방안, 3안은 산자부

수소연료전지사업단과 과기부 수소프린티어사업단의 통합 등이다. 갖가지 안전들마다 이해타산이 맞물려 수소경제센터의 신설은 적지않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산업자원부 조환의 차관은 “수소경제는 에너지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닌 산업전반의 이슈”라며 “수소의 제조, 저장, 연료전지 등의 발 빠른 개발로 2020년에는 자동차 시장의 50%를 수소연료전지자동차가 차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 차관의 발언은 기존 수소경제 로드맵에서 제시된 2040년보다 20년 앞당긴 것으로 이제 수소경제가 토론의 수준이 아닌 정부 차원으로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번 마스터플랜(안)은 지난 7월14일 국회에서 수소·연료전지사업단 홍성안 단장이 발표한 ‘수소경제의 비전과 로드맵’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다. 이에 대해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큰 골자의 계획안이 나와 있어 전변과 대동소이 하다”라며 “올해 12월이면 구체적인 사항들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계획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수소경제와 관련한 전문가, 방청객 등 150여명이 참석해 패널들의 토의를 관심 있게 지켜봤다.

군산 방폐장 유치시 도비 300억원 지원

전북 군산시가 방사성폐기물처리분장(방폐장)을 유치할 경우 도비 300억원 지급과 장학기금 100억 조성, 전기 및 수도, TV시청 요금에 대한 보조가 이뤄진다. 또 군산시에서 남아도는 농산물은 전북도와 군산시, 한수원의 협의하에 전량 판매되고 방폐장과 양성자가속기 건설 등으로 조성 될 1조5천억원의 건설시장에 지역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가 열린다. 강현욱 도지사는 1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군

산시의 방폐장 유치시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전 도민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강 지사는 이 자리에서 “중저준위 방폐장이 군산지역에 유치될 경우, 양성자가속기를 군산에 설치하고 각종 주민지원시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에너지 과학도시 건설 지원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강 지사는 또 “주민투표율에 따라 방폐장 건설기간 군산시 30개 읍·면·동별로 최대 20억원, 최소 5억원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며 이 지원금 총액은 3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방폐장과 양성자가속기 건설, 한수원 본사 이전, 관련 벤처기업 연구단지 조성시 1조5천억원의 신규 건설시장에 지역업체를 50% 가량 참여시키고 군산지역의 잉여농산물도 전량 판매될 수 있도록 도와 군산시, 한수원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강 지사는 “군산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양성을 위해 군산지역 초·중·고·대학생을 위한 시민 장학기금 100억원을 조성하고 전력과 상하수도 사용량에 대해서도 한수원 및 군산시 등과 협의해 요금을 보조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북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최충일 완주군수도 “오랜 낙후와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북도의 마지막 기회인 군산시 방폐장 유치신청을 적극 지지하며 반드시 군산에 방폐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전, 코스타리카 전력통신공사와 협력협정 체결

한국전력이 코스타리카 전력통신공사와 협력협정을 맺었다. 한전은 13일 “한준호 사장과 코스타리카 전력통신공사 카를로스 오브레곤 전력담당 사장은 13일 코스타리카 산호세 매리어트 호텔에서 양사간의 전력산업 분야 교류 및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

다. 한전은 이번 협력협정 체결로 코스타리카 전력통신 공사와 발전 송전 연료개발 및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정보교환과 교류를 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이 지역에서 해외사업 및 자원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코스타리카 전력통신공사(ICE)는 1949년 정부 출자로 설립된 국영기업으로 코스타리카의 발전 및 송배전 등 전력산업과 통신사업의 전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그동안 세계 유수의 전력회사들과 협력협정을 체결,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브라질 전력회사와의 공동사업개발 및 협력협정 체결에 이어 코스타리카 전력통신 회사와도 협력관계를 수립했다”며 “중남미 지역으로의 해외사업 진출 발판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大學에 수소에너지학과 첫 개설

전남 나주의 동신대학교가 국내 처음으로 수소에너지학과(학과장 정훈택 교수)를 개설한다. 2006학년도 신입생 30명을 모집하는 동신대 수소에너지학과는 이미 수시 모집에 나섰다. 동신대는 특히 국내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KIST(한국과학기술원)와 KIER(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EPCO(한국전력연구원), 삼성전자SDI, 현대자동차, POSCO, GS칼텍스, SK, 한국가스공사, 두산중공업 등 산·학·연의 협조가 이루어짐으로써 현장학습을 통한 학점취득은 물론 인턴십을 통해 취업시 우대받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향후 유망업종으로 부각되고 있는 수소에너지 관련학과를 앞서 개설한 동신대는 전남도, 한전, 포스코, 현대·기아자동차 등 이 지역 행정기관 및 기업에서의 장학금도 유치했다. 동신대는 또 지난해 말 제1회 국제연료전지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지

난 1일에는 전라남도와 수소에너지산업과 관련해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분야에 대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교수진으로는 정훈택 교수(KAIST 공학박사), 차인수 교수(조선대 공학박사), 최정식 교수(KAIST 이학박사), 김동묵 교수(전남대 공학박사), 소철호 교수(KAIST 이학박사) 등이 포진되어 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27일 광주와 전남에 배치된 17개 공공기관을 한 군데 모아 신설되는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 합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전 등과 같이 신에너지산업지구가 자리잡게 되기 때문에 수소에너지학과 졸업생들에게 많은 취업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전력변환기술 미국서 인정받아

서울산업대 제어계측공학과 최세완 교수팀이 지난 달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콜로라도주 소재 신재생에너지 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에너지경연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다고 산업자원부가 8일 밝혔다. 이 대회는 미국 에너지부와 세계전기전자공학회(IEEE)가 공동 주최하는 세계적 대회로 우리나라는 2003년 본대회 우승에 이어 2회 연속 상위 성적을 거두었다. 최 교수팀은 연료전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가정에서 발전할 수 있는 소형분산발전시스템의 핵심기술인 계통연계형 인버터를 개발했다. 계통연계형 인버터란 신재생 에너지원의 불안정하고 낮은 직류전원을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된 교류전원으로 변환하고 잉여 또는 부족 전기에너지를 전력회사에 연계하여 매매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이번 입상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분산발전의 핵심기술인 계통연계 인버터 기술분야에서 국제 수준의 연구·개발이 가능해졌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자원개발)**해외자원개발 국가차원 총력을**

유가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자 해외에서 자원개발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유가 상승기에는 이런 목소리가 크다가, 유가가 내려가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있어 아쉽다. 자원개발은 탐사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지금 시작한다 해도 적어도 5년 이상이 지난 뒤에야 그 과실이 온다.

정부나 기업 모두 투자과실은 먼 미래에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해외자원개발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실천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 우선 해외자원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한 해 석유와 가스개발에 투자하는 금액은 6억달러 수준이다. 미국과 영국계 석유 메이저 한 개 기업의 투자액이 한 해 100억달러 이상이고, 프랑스나 이탈리아가 한 해 50억달러를 투자하는 데 비하면 그야말로 영세규모 수준이다. 설사 자금이 마련된다 해도 이를 수행할 기술과 인력이 우리에게서는 부족하다. 세계 43위 규모의 석유개발 기업인 아나다코사의 인력이 3000명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에서 석유개발기업에 종사하는 전체 인력은 300명 내외에 불과하다. 또 인력과 기술을 갖춘다 해도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강대국들과의 힘겨운 경쟁을 벌여야 한다. 최근 러시아 시베리아의 송유관 노선을 놓고 일본과 중국이 벌이는 치열한 외교전에서 보듯이 석유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강대국 간의 경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이같이 우리나라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요소인 자금과 인력, 기술이 모두 부족하고 거기에다 우리 기업의 사업경험 또한 매우 일천하다. 따라

서 국가역량을 결집시키지 않고는 해외자원개발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주요국들의 석유개발기업들도 지금은 대부분이 민간 기업이지만 1980년대 말까지만해도 국가의 막대한 지원하에 국영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하는가. 먼저 정부가 선도해 해외자원개발의 투자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한 해 2000억원 정도를 해외 석유개발 사업에 저리 용자로 지원해 주고 있지만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따라서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하겠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확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검토 중인 유전개발펀드와 같이 민간의 자금이 유전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는 인력과 기술의 풀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부족한 인력과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다수의 기업이 자원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석유개발기업의 전문화를 유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여러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자원개발사업이 주력업종인 기업은 거의 없다. 이런 기업구조에서는 장기간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자원개발 산업을 성장시킬 수 없다. 일본은 대다수 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유독 석유개발 부문만은 아직 세계 50대 기업에 드는 기업이 하나도 없는 이유도 전문화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은 석유개발기업이 전문화, 대형화하지 않고는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다수의 유전사업들을 통합해서 석유개발 전문 대형회사로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구조개편을 실시 중이다. 우리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석유개발 기업의 전문화, 대형

화 유인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지원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석유개발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해외자원 확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부나 기업 모두 유가변화에 흔들림 없이 해외에서 자원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다.

유전개발펀드, 내년 상반기 베트남 광구 대상 첫 발행

민간자본의 유전개발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전개발펀드가 내년 상반기 베트남 15-1광구를 대상으로 첫 발행될 전망이다. 또 한국석유공사를 동북아 지역의 메이저급 자원개발 전문회사로 육성하기 위해 이 회사의 자산을 4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민간여유 자금이 유전개발에 효과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세계상 인센티브 제공과 투자원금의 일정수준을 보장하는 유전개발펀드를 내년 상반기 발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추정 매장량 7억5000만 배럴의 베트남 15-1 광구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베트남 광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석유공사와 SK 등이 일부 지분을 펀드에 파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유전개발 펀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투자자 보호 차원의 세제지원과 원금의 80~90% 수준을 보장해주는 신용보강 방안을 고려 중이며, 유전개발 펀드 규모가 총 1조60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오영호 자원정책실장은 “오는 2013년까지 유전개발에 약 16조원이 필요한데 이 가운데 10%는 펀드로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석유공사를 동북아 지역의 메이저급 자원개발 전문회사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서 “석유공사의 자산 규모를 현재의 1조1000억 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고 수출입은행의 자원개발 금융지원 자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석유공사를 2013년까지 일일 산유량 30만 배럴의 메이저급 자원개발 전문회사로 육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국내 에너지산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원유 자주개발율을 18%로 높일 수 있다”며 “자원개발과 에너지플랜트의 성공적 동반진출 확대시 2010년까지 에너지산업 플랜트 수출 200억 달러와 세계시장 점유율 2.5%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자원 개발해 고유가 대응” 초점

내년도 정부의 에너지분야 총지출은 지난해 보다 9.2% 증가한 3조7,747억원으로 집계됐다. 본지가 29일 입수한 정부의 내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세출 내역과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정부의 에너지 분야 지출규모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에특과 전력기금은 정부의 에너지분야 양대 재원이다. 정부의 이 같은 지출계획에서 해외자원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석유 비축사업 강화를 통해 고유가 시대의 위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기본 취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에너지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 예산도 크게 확충됐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예산이 줄어든 대목은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다. 그러나 올해도 세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점이 여전히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산업 선진화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의구심을 제기하

고 있다.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에특회계는 ▲지속가능 발전한 에너지시스템 구축 ▲석유·가스 안정공급 ▲석탄산업합리화 ▲일반광물자원 개발 등 4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년도 세출규모는 올 해에 비해 11% 증가한 2조5,027억원. 에특을 통해 내년에 가장 축복 받을 사업은 지속가능발전 에너지시스템 구축의 한 분야인 에너지·자원 R&D.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규모가 작다는 비판도 있지만 올 해에 비해 예산이 48% 증액(980억원), 책정됐다. 비축기지 건설이 진행 중인데다 유가도 크게 올라 석유비축사업의 내년 예산은 78% 증가한 3,812억원에 달했다. 석유, 가스 뿐 아니라 철광석, 유연탄 등 주요자원의 자주개발을 높이기 위한 해외자원개발 지원예산도 올 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국내의 유전개발을 돕기 위해 에특에서 3,833억원이 지원된다. 올해보다 31% 증가한 수준이다. 이와함께 해외 광물자원개발 예산도 880억원으로 34% 늘었다. 고유가로 연탄소비가 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탄가안정 보조금 소요도 크게 늘었다. 내년도 탄가안정 및 폐광대책 예산 역시 올해보다 62% 증가한 3,316억원에 달할 것. 고유가로 당장 쏟아야 할 돈이 크게 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국내 일반 광업 육성 예산은 오히려 크게 감소했다. 에특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난해 보다 40% 가까이 줄어든 1,766억원에 머물렀다. 에특 재원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전력기금에서 신규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90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이를 감안해도 올 해보다 200억원 가량의 예산이 감소했다. 국내 광업육성 자금은 올 해 629억원의 반토막에도 못 미치는 247억원에 그쳤다.

◆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안 =소비자의 전기요금에 일정요율의 법정부담금이 포함돼 조성되는 전력

산업기반 기금의 올 해 수입은 총 1조8,966억. 지난해 보다 5.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6,246억원을 떼고 총 1조2,720억원을 사용키로 했다. 지난해 보다 지출규모는 5.7% 증가한 수준이다. 전력기금 운용계획에서도 R&D의 인기는 지속돼 전력 R&D에 올해보다 62%가 증가한 2,349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전력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예산도 513억원으로 35.8% 늘었다. 신규 사업으로는 태양광 주택 보급에 새로 540억원이 지원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예산 903억원이 편입됐다. 전력분야의 신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기업과 민간이 공동투자조합을 결성해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데도 신규로 150억원의 지원예산이 편성됐다. 또 농어촌 전기수용가의 부담완화를 위해 농어촌 전기공급 재정융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함에 따라 전력기금이 관련 채권을 인수키로 하고 여기에 285억원을 지출키로 했다.

이에 반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2,762억원)에 비해 1,000억원 이상 줄어든 1,539억원,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사업도 11% 감소한 933억원을 기록했다. ▲전력수요관리사업(1,219억원, 3.8% 증가) ▲전력기반조성용자(1,857억원 8.6% 증가) ▲타 에너지 지원사업(2,538억원, 6.6% 감소) 등은 올 해와 비슷한 규모로 예산이 짜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의 에너지분야 예산 지출은 고유가 대응능력 강화와 첨단기술 확보에 맞춰진 게 특징”이라며 “다만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에너지분야의 사업은 많은 데 비해 예산 확보엔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대책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미국 멕시코만 석유시설 강타

등 세계적인 자원공급 위기 요인이 계속 등장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위해 채무보증, 관세감면 등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容晟)는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대책’ 보고서를 통해 자원의 가격 상승과 공급 중단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의 채무보증, 세액공제 확대, 관세 및 수입부과금 면제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국제적인 자원문제가 생길 경우 쉽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일부 대기업에 국한되어 있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원자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에너지특별회계 지출예산 2조 1,660억원 중 해외자원개발 용자지원금 규모는 2,580억원으로 1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 사업으로 현재의 에너지특별회계 지원규모로는 사업 초기단계의 소요자금 총당 규모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해외자원개발 총투자액 중 정부의 금융지원 비율은 석유·천연가스과 유연탄·광물자원에 각각 22%, 35%로 50% 이상을 지원하는 일본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민간기업의 투자는 대부분 지분참여의 형태로 위축되어 있다. 또한 연간 국내 소비량 중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자국개발율이 대부분의 자원에서 5% 내외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석유의 경우 3.8%로 프랑스(93%), 스페인

(56%)은 물론 이웃 중국(17%), 일본(10%)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90년대 이후 에너지·광물 자원 가격의 안정이 지속되면서 국가적 관심 및 정책의 우선순위가 하락하였고,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주력 사업이 아닌 부속사업 형태로 추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석유는 물론 다른 자원의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세계적으로 자원확보를 위한 이른바 ‘자원전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기업의 참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부의 채무보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해외자원개발업체가 금융기관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채무를 일정부분 보증해 주는 것으로서, 이미 일본에서는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채무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채무보증제도를 도입할 경우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사업타당성 평가를 전담하는 심사 및 평가 전문조직을 운영하여 정부와 금융기관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행 해외자원개발 설비투자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설비투자액의 15%까지 확대하여 초기의 막대한 투자비와 장기의 회수기간이 요구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그리고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자원을 도입할 때 관세 및 수입부과금 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기업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기존의 전략광물자원 외에도 니켈·주석 등 기초금속의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보고서는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원보유국의 광역지질·광구 등에 대한 정보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자원개발 및 법률·세제 정보 지원 체계 구축, ▲민간기업에 대한 공기업의 유망사업정보 제공, ▲해외자원분야 전담 조직 및 기능 확대 개편, ▲전략지역에 대한 자원외교 확충 등을 제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이 10% 상승할 때 제조업의 제조원가 상승부담은 0.7%로 서비스업(0.2%)에 비해 3배 이상 높다”며, “현재 진행중인 에너지·자원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자원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언급했다.

가스공사, 베트남 자원개발 협력 확대

한국가스공사와 베트남 비나신(VINASHIN: Vietnam Shipbuilding Industry Corporation)사는 지난 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협력협정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협력협정 서명을 통해 가스공사는 기존 베트남 남부지역의 호치민시 개발사업은 물론 북부 하노이 지역 자원개발사업에도 본격 참여하게 됐으며 하노이 지역에서 추진되는 석유·가스분야 프로젝트에 대해 자본 투자와 함께 관련기술을 전수할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호치민지역의 자원개발사업을 위해 페트로베트남 가스사와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배관건설 기술자문사업 등을 펼쳐온바 있다. 비나신사는 지난 96년 설립된 국영기업으로 20개의 조선소와 30개의 회사를 포함해 총 72개의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기업들, 해외 에너지 개발 활기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육박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에너지 자원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주)는 최근 현대종합상사, 예멘 국영 가스회사, 미국

헌트, 프랑스 토탈 등과 공동으로 예멘 마리브 가스(LNG)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해외 에너지 개발사업은 LNG, 석유 등 필수 연료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격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유가 시대의 돌파구로 평가되고 있다. 예멘 가스개발 사업의 지분 비율은 한국석유공사, 삼환기업 등으로 구성된 SK(주) 컨소시엄 10%, 현대종합상사 6% 등 한국측이 16%에 달하며, 나머지는 토탈 42.9%, 예멘 국영가스회사 23.1%, 헌트 18% 등이다. 국내기업의 투자액수는 SK(주) 1천224억원, 삼환기업 277억원, 현대종합상사 1천16억원 등이다.

SK(주)는 이와 함께 한국석유공사와 공동으로 지난 7월26일부터 베트남 15-1 광구에서 탐사정 시추에 착수, 해저 3천372~4천376m의 기반암층에서 하루 평균 9천197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을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분은 석유공사와 SK(주)가 각각 14.25%와 9%를 갖고 있으며 나머지는 페트로베트남 50%, 코코노필립스 23.25%, 프랑스의 지오펜트 3.5% 등이다. LG상사는 앞서 지난달 22일 카자흐스탄 육상 아다(ADA) 광구의 개발을 추진 중인 ‘카자흐스탄 컨소시엄’의 지분 50%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석유개발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LG상사는 또 지난 3월 한국가스공사, 대성산업, 서울가스 등과 공동으로 필리핀 팔라와섬 북서쪽 80km 해상 SC38광구의 지분 4.9%를 기존주주인 PNO-EC로부터 매입, 유전개발에 나섰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지난 7월 24일 미얀마 북서부 해상에 위치한 A-3 광구 개발권에 대한 공동 투자자들의 지분 참여가 확정돼 755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A-3 광구 개발은 현재 탐사작업이 진행 중인 A-1광구 남쪽에 위치한 가스를 탐사하는 사업이다. 이 지역에는 3

조~10조m³의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GS홀딩스는 3월 인도네시아 념 1, 념 2, 워캄 등의 광구에 142억원을 들여 석유탐사사업에 투자한다고 공시했다.

